

영양관련 보도의 현실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영양연구부 김초일

요즈음은 아마도 영양관련 보도가 신문이든, TV든, 아니면 라디오, 잡지 등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다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소위 '정보의 홍수'시대에 영양관련 정보 또한 뒤질세라 여기에 동참한 것은(아니면 동참된 것은) 분명히 다행인 것 같으나 그 정보 또는 보도의 정확성을 포함한 질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 1조에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방송"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논평 및 여론과 교양, 음악, 오락, 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거창하고 유식해 보이는 단어들의 나열로 시작한 방송법에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나 내용의 편성·제작에 관해 동법이나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해 어지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안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진위, 질의 고하 등을 문제삼고자 한다면 기대어 볼 여지는 있다. 방송법 제 5조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해 명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고, 특정한 정당, 집단, 이익,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며, 민족국가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분명히 '의무나 책임'이라는 단어와 결부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어휘들이 총 동원된 듯한 기분이 드는 문구들이다.

자고로 말이란 것이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듯이 그 해석 또한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속해 있는 상황에 따라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말하는 이의 의도대로 듣는 이가 이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 될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이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즉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말처럼 듣는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말하는 이가 원하는 바 대로 정보가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정보가 받아들여 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의사 전달 방법을 택할 의무(?) 또는

책임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결과이긴 해도 일반대중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쉽게 접하는 식품관련 정보원으로 서 71.3%가 TV를 그리고 70.1%가 신문을 꼽았고, 여기에서 얻은 식품·영양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50~60%정도라고 했다. 이를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그리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한 가지 차이점 또는 고려점을 언급한다면 보도 내용이 누구의 입을 통해 방송되었거나 또는 누구의 이름 아래 쓰여졌는가에 따라 그 신뢰도가 급변한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은 '직함(職銜)'을 좋아한다. 그 위에 우리 국민은 "사(師 또는 士)"자를 좋아한다. 우리 국민은 교수, 의사, 박사를 좋아하지만 특히 그것이 건강·영양 관련 사항일 때는 영양학자나 영양사보다는 어떤 일인지 의사를 앞에 세운다.(師가 士보다도 좀 더 나은지?) 굳이 여기서 의사의 영양학적 지식 云云하면서 누가 앞에 서야 하는가를 말하기 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자를 동경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 또한 플러스 요인이고 의사의 흰 가운은 때로는 일부 대중을 마치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게 만들기도 한다. 또 한가지 "의사"라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듯한 안경 낀 흰 가운속의 남자'가 연상되는 반면 "영양학자"라는 단어는 '웬 아줌마'가 연상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영양이란 식생활에서부터 시작되며 식생활이란 누구나가 매일 영위(?) 하고 있는 것이라 저마다 다 음식이나 영양에 대해 일가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다른 듯한 '웬 아줌마'의 열변은 말 잘하는 옆집 아줌마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TV보다는 신문에 기사와 이름 또는 직함만이 실릴 때 영양학자의 변(辯)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단순치 않은 것 같다. 신문에 실리는 전문 기사에는 그 원고 청탁선에서부터 여러가지 변인이 작용하며, 일단 영양학자에게 원고 청탁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원고의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 최근 모 신문사에서는 '전문 기자제'를 도입해 각 분야별로 '소위 전문가'를 확보해 그들로 하여금 관련 기사를 쓰게 하고 있다. 다른 신문사와는 차별화된 진보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시도임에는 분명하나 그 내실은 과연 어떤지? 이들 중에는 건강이나 영양·식품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전문기자가 3-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나 박사이다. 그 박사가 아마도 식품·영양 관련 담당자인 듯 하다. 그의 전공은 '위생공학'이라는 상당히 낯선, 우리에게만 낯선 것이 아니라 식품학 전공자들에게 마저도 낯선,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

박사(博士)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에 관해 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그 분야가 조금만 어긋나도 그는 더 이상 博士가 아닌 薄士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영양 관련 보도의 현실은 대중 매체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3중주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거기에 정부가 지휘자로 단에 올라가 있고...

이 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3연주자와 정부가 모두 맡아야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만 우리 영양학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나 행동을 먼저 짚어

본 다음에나 다른 연구자들과 지휘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생길 것 같다. 취재 및 보도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의 요구 또는 힐난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의 노력없이 보도의 진위나 질을 닦하기 전에, 외국의 경우처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회나 영양사회 등에 Public Information Committee나 Spokesperson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지 않을까?